

韓·러·오스트리아 3국 정상 의 동계올림픽 유치전

盧 “온국민의 열망... 한반도 평화에 도움”

푸틴 ‘정치적 영향력’ 무기...구겐바워 ‘하드웨어’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2일(한국시각 3일) IOC 위원들이 머물고 있는 과테말라시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국측 이근희, 박용성 IOC 위원과 한승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동석했다.

2014년 동계 올림픽 후보도시 결정에 관한 과테말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개최지 후보 국가인 한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정상간 치열한 ‘유치전’의 막이 올랐다. <관련기사 23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오후(한국시각 3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과테말라시티에 도착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알프레드 구겐바워 오스트리아 총리 등 3개국 정상이 모두 과테말라시티에 집결, 유력 외신들과 인터뷰를 갖고 IOC 위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접촉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득표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대통령 마케팅’이라는 IOC 총회장 주변의 대체적 분석이다. 유치 후보도시의 3개국 정상이 총출동해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경쟁국가의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OC 총회장 주변에서 3개국 정상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각 정상들의 유치 운동 기조는 확연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철저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중심이고 자신은 막후에서 지원 역할을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 테크포스트(TF)와 유치위원회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일 오후 5시30분께 IOC 위원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로게 위원장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로게 위원장에게 “올림픽은 한국의 발전, 시민의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한국 국민의 올림픽 개최

열망이 강하다”면서 IOC를 이끄는 로게 위원장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의 풍도가 매우 투명하게 대해 평가를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로게 위원장은 이에 “평창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대해 축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이 세계 스포츠계와 올림픽에 기여한 바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는 취지의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까지 IOC 위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다양한 수준의 접촉활동을 갖고 막판 ‘표심’을 끌어내는 득표활동을 벌였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인 소치가 경쟁후보지인 평창이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비해 동계스포츠 시설이 열악하고

준비 정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한 듯,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자신의 영향력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유치전을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도 연결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전세 비행기 9대를 동원해 1천명 이상의 유치단을 파견하고, IOC 총회장 인근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대형 아이스쇼를 계획하는 등 대대적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IOC 유리위원회가 ‘IOC 본부 호텔인 레알 인터콘티넨탈 호텔 이외의 지역에서 후보도시 관계자와 IOC 위원이 접촉하는 것은 윤리 규정 위반’이라고 못박으면서 러시아의 전략은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최근 올림픽 유치위원장 교체,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나온 도핑 양성반응 등 악재가 터지면서 약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음소작전’을 펼치며 막판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겐바워 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AP, 로이터 등과의 인터뷰에서 “잘츠부르크는 돈으로는 러시아 소치, 평창과 싸울 수 없지만 이미 잘 갖춰진 시설, 안전한 환경, 열정적인 팬들과 같이 소치와 평창에는 없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과 시각

7세 이하의 안돼요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최근 기자는 3회에 걸쳐 ‘미래의 문화 애호가를 키우자’라는 시리즈를 연재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도록 해 문화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문화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며칠전 이번 시리즈와 관련, 광주 지역 음악과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클래식 연주회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이 교수는 공연장 분위기를 맡치는 중고교생들 음악 수행평가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짚어 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문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놀이공원 가듯 공연장과 전시장에 가라’는 제목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술관의 경우는 다르지만, 클래식 연주회는 ‘준비된 관객’을 필요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놀이공원’ 가듯 찾는 곳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어린이 전용 공연이나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클래식을 포함한 모든 공연은 7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을 불허한다. 관람 티켓에 명시돼 있고, 공연장 입구 안내문에도 적혀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하거나, 무시하곤 한다.

이 교수는 ‘놀이공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양스 때문에 혹시 기사를 꼼꼼히 읽지 않고 제목만 본 엄마들이 ‘아이에게 문화를 체험하게 해준다’며 무작정 연주회장을 찾지 않을까 걱정했다.

전화 통화 며칠 후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공연에 다녀온 지인이 실랑이 끝에 간신히 5살 짜리 아이를 공연장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5살은 입장이 안된다는 기자의 말에 ‘우리 아이는 음악을 잘 듣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최근 찾았던 연극 공연장에서는 3~4살 아이를 데려온 엄마도 목격했다.

모든 엄마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배워서 음악을 잘 듣는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7살이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공연장에 데려가는 것 역시 바람직 하지 못하다. 공연의 내용과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함께 예습하는 게 필요하다.

연주회장에서는 ‘클래식이 아이들 인성 발달에 좋다’는 사실에 집착한 엄마에게 끌려온 초등학생들이 불분림을 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엄마의 과욕은 아이에게 ‘감동’이 아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mekim@kwangju.co.kr

염동연·이부영·서경석·전재호씨 기소

검찰 ‘제이유 로비’ 중간수사 결과...13명 구속, 14명 불구속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일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경석 목사,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월초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아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판매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주수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22명을 일간해 1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5년 1~3

월 주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하여금 물품 4억1천여만원 어치를 제이유네트워킹에 납품하게 해 1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에게는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주 회장 측근으로부터 제이유 자금 700만원을 받고, 제이유 사건과 별도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같은 사람의 돈 3천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염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본인은 제이유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전 한 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관매매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 측에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2천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서 목사는 국제정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가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쇠고기 해결돼야 美 FTA 비준 원만”

이혜민 기획단장 “전문직 비자쿼터 최소 1만5000개 이상 목표”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3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FTA가 원만하게 다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SBS와 KBS, BBS, C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 미국 의회 내 실력자들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이 단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소관인정서 정부가 미국 의회와 직접 협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FTA가 미·호주 FTA보다 교역 등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호주보다는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1만5000개의 전문

직 비자쿼터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1만5000개 이상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미국 의회에 달려 있지만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최우선 순위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의회의 비준 전망에 대해 “미국 내 절차 등을 고려하면 9월 말 이후 미국 의회 내에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의회는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책임지고 설득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 의회나 한미 재계 장구를 통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유비모드' (Yubi Mode) featuring a grid of images showing various services and a large text box with the slogan '실시간 유대폰으로 매장/직원 관리!' (Real-time mobile phone for store/employee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KT 파워텔' (KT PowerTel) featuring a woman holding a mobile phone and a car dashboard. Text includes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and 'KT 파워텔 112'.